

# 한국판 뉴딜, 세계로 뻗는다... 그린·디지털 30兆 수출 지원

##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비대면 산업 등 7개 산업 재분류 수출·수주 대출 공급, 한도 확대 수주 전 중장기 보증한도 先제공 이후엔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 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우선 그린 뉴딜 분야는 선진성숙, 신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 추가 금리혜택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1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 확대
2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높음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3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나, 필리핀 등)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4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 협력 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 제도는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한다. 또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D.N.A 융합 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외진출 시 레퍼런스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 1·4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총 226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 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는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초기 창업기업 디딤돌... 美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에 3兆

중기벤처부 R&D·투자·보증·융자 '결합' 기업 3000여 곳 수혜 기대 일자리 2만여 개 창출 계획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뉴스1

정부가 창업 초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의 복합 금융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 보증, 융자가 결합한 이같은 방식으로 내년까지 3000여개 기업에 총 3조원을 지원해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가 대표적이다.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 투자 방식 다양화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도 추진한다.

기술보증을 받아 기술력이 검증됐지만 투자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복합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대출(Venture Debt)'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26억3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투자의 15%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이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 500억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융자기관 입장에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기업은 융자를 받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 투자가 아닌 융자여서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유선부 보증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IP) 보증 후 일정 시점에 보증액의 일부를 IP지분으로 융자 상환할 수 있는 유선부 보증도 올해 새로 도입한다.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 투자유선부 보증·IP투자유선부 보증
-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 기술보증·벤처투자 복합지원

### R&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 프로젝트 단위 R&D 사업화 보증
-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 투자·보증 복합지원
-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

복합 금융 지원방안 추진과제

### 복합금융을 활용 벤처투자 틈새보완

- 보증을 위한 창투자, LLC형 VC의 신속한 펀드 결성 촉진
- 지방중심 기술보증기금 직접 투자
- 버팀목 펀드·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기술중심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 민관공동 혁신기업·벤처투자자간 인공지능매칭 플랫폼 구축
- 신기술투자모형·기술혁신역량지수 개발
-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인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채권형 투자를 말한다. 이는 고위험·고수익인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에 비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

기보와 한국벤처투자(KVIC)가 기술기업에 대한 첫걸음 투자도 확대한다. 기보가 우수 기술기업을 선별해 추천하면 KVIC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기보 투자 방식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을 추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단위 기술개발 사업화금융'을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이나 '후불형 기술개발'을 늘리고,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 뉴딜 보증 신설 등을 통해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벤처투자가 선망하고 벤처·유니콘 기업이 '코스피 3000·코스닥 1000'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는 제2벤처법의 실현과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준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제2벤처법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중기부는 이번엔 마련한 '기술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복합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틀새 209만명에 3兆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을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209만명에게 총 2조96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276만명 가운데 76%가 이틀사이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지난 11일(홀수)과 12일(짝수)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13일부터는 홀짝과 관계없이 접수를 시작했다.

조분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신속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그중 7% 정도는 (대상자) 휴대폰 사용 등의 문제로 도달이 되지 않았고, 일부는 영업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다"면서 "문자 등을 통해 미신청자들에게 계속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버팀목 자금 신청과 지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진공 서울강원 지역본부를 찾았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부서로, 어머니 같이 어디가서 비밀 언덕이 있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버텨주세요 정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